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누가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원하는가: 계엄·탄핵 국면의 승자와 패자

성예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누가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원하는가

성예진^a
2026. 7

a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yaejinsung@chonnam.ac.kr)

인용 정보

성예진 (2026). 「누가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원하는가: 게임 탄핵 국면의 승자와 패자」.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IFS 워킹페이퍼 No.2026-01, Vol. 6).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문제제기	06
2. 정치적 위치와 사법적 해결에 대한 태도	08
3. 자료, 측정, 분석방법	10
4. 분석	13
5. 정리 및 결론	19
참고문헌	21

초록

본 연구는 계엄과 탄핵,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시민들이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한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2026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선택에 따른 정치적 위치가 일반적인 정치갈등 해결 방식, 3대 특검 평가, 계엄 사태 처리 방향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적 타협과 사법적 해결 사이의 일반적 선호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그 실질적 크기는 크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계엄 책임 추궁에서는 두 집단의 태도가 크게 갈렸다. 이는 시민들이 사법적 해결의 일반 원칙 자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접 연결된 구체적 사법절차를 정치적 위치에 따라 훨씬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적 문제 해결에서 절차의 정당성과 의미가 정치적 승패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 종결이 곧 정치적·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치의 사법화, 승자와 패자, 정치갈등, 사회통합, 계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erceive the judicial resolution of political conflict following martial law,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Using the 2026 National Survey on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it analyzes how political positions defined by presidential vote choice are associated with general preferences for judicial resolution, evaluations of the thre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accountability for the martial law episode. Winner–loser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ubstantively modest in general preferences between political compromise and judicial resolution. By contrast, the two groups were sharply divided over the ongoing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s and the handling of the martial law episode. These findings show that political position matters far more for evaluations of concrete judicial processes than for general principles of judicial resolution, suggesting that legal closure may not lead to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when the legitimacy of judicial processes is itself politically contested.

Keyword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inners and Losers, Political Conflict, Social Integration, Martial Law

1. 문제제기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최근 뚜렷이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는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명명되는 이 현상은 (Tate and Vallinder 1995; Stone Sweet 2000; Ferejohn 2002; Hirschl 2006) 공고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국면을 특징짓는 현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의 거취, 정당의 존립, 주요 입법의 정당성, 선거 분쟁과 같은 정치적 쟁점이 대의기구 내부에서 해결되기보다 사법기구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1996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과거사 청산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 대통령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적 국면이었다. 일련의 선거법 재판을 포함한 다양한 사법적 개입과 특검·소송 절차가 정치과정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고, 최근 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수사와 처벌이 정치적 혼란을 종결하는 핵심 수단처럼 간주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빈도와 정치적 중요성 양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적 분쟁을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전환하는 일은 이제 그 빈도와 강도 면에서 일상적이고 우선적인 정치문제 해결 통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의제에 비추어 보자면, 사법 절차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대립의 배경이 된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갈등의 법적 해결은 곧바로 통합을 담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문제해결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및 조정, 그리고 '다음 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패자의 승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해결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갈등을 종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승패의 확정과 처벌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갈라진 집단 사이의 화해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적 문제해결이 정치갈등을 봉합하는 정당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경쟁과 진영적 이해의 바깥에 선 중립적 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정한 절차적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정치적 협상은 세력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관계와 권력의 비대칭성이 작동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은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당파적 이해보다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잘잘못을 가린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연구는 사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사법적 절차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갈등 해결의 역할이 정당한 해결 방식으로서 지속될 수 있는지는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는가와 무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제3자로서의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면, 시민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법적 판단 자체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절차가 정치적 경쟁과 진영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판정의 과정으로 인식된다면, 사법적 해결에 대한 태도 역시 시민들이 현재의 정치갈등에서 놓인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갈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선호가 정치적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면, 시민들에게 사법과정은 갈등을 공정하게 매듭짓는 중립적 심판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지지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선호는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해당 절차가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기대와도 결부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사법적 문제해결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그와 관련되는 정치적 조건으로서, 계엄과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이 국면에서 응답자가 어떠한 정치적 위치에 놓였는가에 주목한다. 여기서 정치적 위치는 선거에서의 승패만을 뜻하지 않는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응답자가 어느 정치세력과 가까이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통해 어떠한 승패의 위치에 놓였는지가 중첩된 상태를 가리킨다. 물론 정치적 위치에 따른 선호 차이를 모두 도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은 사법적 문제해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와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 사법절차에 대한 평가를 모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선택을 이러한 정치적 위치를 포착하는 경험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는 각각 선거의 승자와 주요 패자 집단으로 구분하되,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 역시 서로 다른 정치적 위치를 가진 별도의 집단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치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 대한 선호라는 세 층위의 태도가 이러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2. 정치적 위치와 사법적 해결에 대한 태도

사법적 해결에 대한 시민의 선호에는 서로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계엄이나 부패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규범적 동기, 정치적 타협보다 사법적 판단이 더 적절한 해결 방식이라고 보는 절차적 동기(Tyler and Rasinski 1991), 그리고 사법절차가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위치적 동기가 그것이다(Doherty and Wolak 2012; Bartels and Kramon 2020). 이 글은 이 가운데 특히 정치적 위치가 사법적 해결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위치적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이 현재의 정치적 갈등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는 기존의 정치적 정렬을 승패의 결과로 가시화하고, 주요 경쟁 진영의 지지자들을 승자와 패자로 분명하게 가르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법적 해결에 대한 태도가 절차의 예상 결과와 결부된다면, 그 차이는 선거 이후 서로 다른 정치적 위치에 놓인 집단들 사이에서, 특히 승자와 주요 패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시민의 정치적 태도가 자신이 처한 승자와 패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나 정당의 승패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민주주의 만족도,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Anderson et al. 2005; Blais and Gelineau 2007; Curini, Jou, and Memoli 2012; Dahlberg and Linde 2017; Mauk 2022; 조진만 외. 2011; 김용철 외. 2013; 김희민 외. 2017; 길정아·성예진 2023). 승자-패자 연구는 정치적 경쟁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가 이후의 정치적 판단을 구조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전통이다. 승패가 정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로 작동한다면, 정치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와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한 평가 역시 정치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이 다루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대통령선거로 승패가 가

려진 뒤에도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책임 규명의 문제가 특별검사의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국면에서 선거의 승패는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기존의 정치적 입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선택은 단순히 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뿐 아니라, 계엄·탄핵·대선으로 이어진 연속된 갈등 속에서 응답자가 놓인 정치적 위치를 함께 반영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승자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통로로, 패자는 자신이 지지한 진영에 불리한 결과를 부과하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개별 응답에서 규범적·절차적·위치적 동기를 직접 분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이 글은 일반성의 수준이 다른 세 가지 태도를 대통령선거 투표선택으로 포착한 동일한 정치적 위치의 축에서 분석한다. 하나는 정치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이고, 나머지 둘은 수사 주체와 대상이 구체화된 3대 특검에 대한 평가와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 대한 선호이다.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면, 정치적 위치가 개별 사안을 넘어 보다 일반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그 차이는 제한적인데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 절차에서 격차가 크게 확대된다면, 이는 정치적 위치에 따른 분화가 사법적 해결의 일반 원칙 자체보다 현재의 구체적 사법절차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3. 자료, 측정, 분석방법

이 글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2026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N=3,000, 모바일·웹 조사)를 분석한다. 조사 시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여섯 달가량 지나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이 진행 중이던 시기이다. 계엄과 탄핵의 여파가 남아 있고 그 사법적 처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위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정치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이다. 이 문항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사안(예: 과거 정권 수사, 탄핵 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두 견해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사회 통합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지시문과 “정 치권에서 소모적 논쟁을 하느니, 검찰/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잘 못을 명확히 가리고 처벌하는 것이 낫다”라는 지시문 중 어느 문장에 더 동의하는지 질문하였으며, 동의 정도에 따라 강한 타협, 온건한 타협, 온건한 사법, 강한 사법의 4 점 서열 척도로 조작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선호가 강함을 의미 한다.

둘째, 진행 중인 구체적 절차에 대한 평가로서 3대 특검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하고 있다”부터 “매우 잘못하고 있 다”까지 4점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에서는 값이 클수록 특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되도록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 생님께서서는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 처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1=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 2=핵심 책임자 중심 제한 조사·처벌, 3=관련자 전반 철저 조사·처벌, 4=전반적 의혹 까지 폭넓게 조사·정리로, 값이 커질수록 계엄 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의 범위

가 확대되도록 조작화하였다.

표 1. 변수 정보

	변수명	변수 내용	변수 코딩
종속변수	정치갈등 해결 방식 선호	정치갈등을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과 수사·재판 등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측정	1= 강한 정치적 타협, 2=온건한 정치적 타협, 3=온건한 사법적 해결 4=강한 사법적 해결
	3대 특검 평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3대 특검 진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1=매우 잘못함, 2=대체로 잘못함, 3=대체로 잘함, 4=매우 잘함
	계엄 사태 처리 방향	계엄 사태를 종결하고 미래 과제에 집중하는 방안부터 조사와 책임 추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의 처리 선호	1=통합·미래 과제에 집중, 2=핵심 책임자 중심 제한, 3=관련자 전반 철저 조사·처벌, 4=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
독립변수	투표선택에 따른 정치적 위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을 기준으로 이재명 투표자, 김문수 투표자, 이준석 투표자, 기권자를 구분	1=이재명 투표, 2=김문수 투표, 3=이준석 투표, 6=기권
통제변수	주관적 이념성향	자기평가식 이념성향	0~10 숫자가 커질수록 보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1=여성, 0=남성
	연령	응답자의 만 연령	18~88세
	학력	응답자의 교육수준	1=고졸 이하, 2=대학 재학 및 졸업, 3=대학원 재학 및 졸업
	거주지역	응답자의 권역별 거주지역	1=서울, 2=인천/경기, 3=대전/세종/충청, 4=광주/전라, 5=대구/경북, 6=부산/울산/경남, 7=강원/제주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1=200만원 미만, 2=200-400만원 미만, 3=400-600만원 미만, 4=600-800만원 미만, 5=800-1천만원 미만, 6=1천만원-2천만원 미만, 7=2천만원 이상

첫 번째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직접 지목하지 않고 정치갈등의 해결 방식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를 묻는다. 반면 3대 특검 평가와 계엄 사태 처리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 절차에 대한 평가와 책임 추궁의 방향을 묻는다. 따라서 세 변수는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기보다, 정치적 위치와 사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해결 원칙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평가까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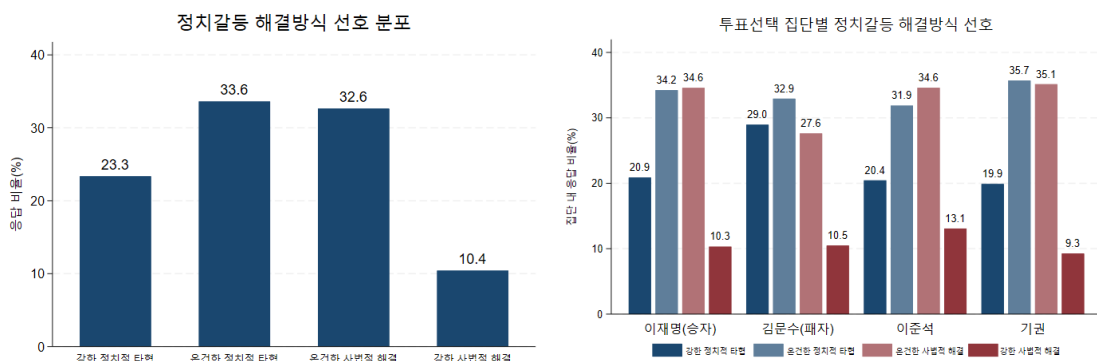
독립변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으로, 계엄·탄핵·대선으로 이어진 이 국면에서 응답자의 정치적 위치를 포착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를 선거의 승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를 주요 패자 집단으로 두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와 기권자 또한 별도 범주로 측정한다. 정파적 지지와 달리 투표선택은 이 국면에서 응답자의 실제 투표행위를 보여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분석 방법은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통제변수는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 이념성향,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소득을 포함하였다.

4.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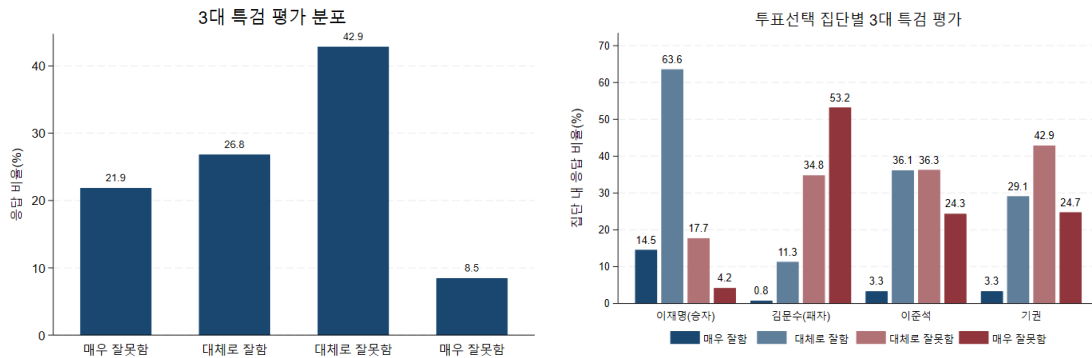
첫 번째 종속변수인 정치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 분포를 보면, 강한 정치적 타협 23.3%, 온건한 정치적 타협 33.6%, 온건한 사법적 해결 32.6%, 강한 사법적 해결 10.4%로 나타났다. 이를 두 계열로 구분하면 정치적 타협 선호는 56.9%, 사법적 해결 선호는 43.0%였다.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타협을 선호하는 응답이 다소 우세했지만,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응답도 전체의 40%를 넘었다.

그림 1. 정치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



투표선택별 분포에서는 사법적 해결 선호가 선거의 승자인 이재명 투표자에서 44.9%, 주요 패자인 김문수 투표자에서 38.1%로, 두 집단 사이에 6.8%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직접 평가하는 문항이 아니라 정치갈등의 해결 방식에 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를 묻는 문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 승자-패자 집단 사이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에 비해 김문수 투표자에게서 사법적 해결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강한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3대 특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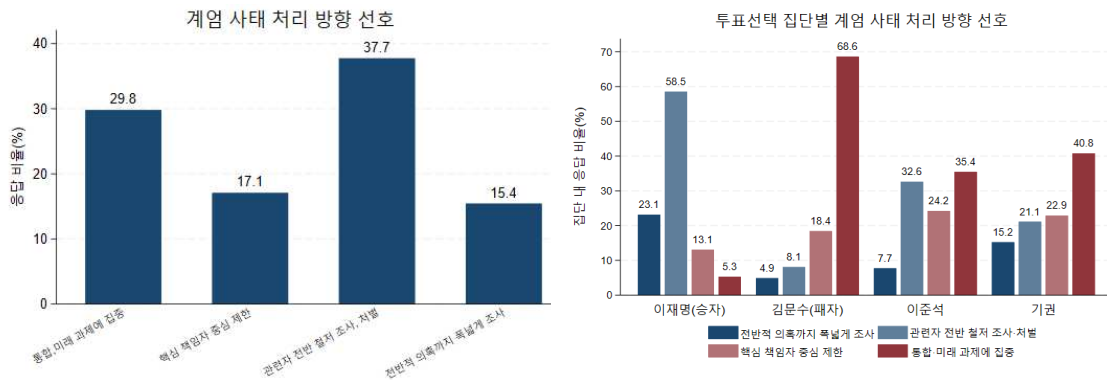


두 번째 종속변수인 3대 특검 평가의 분포를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9%,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6.8%, 대체로 잘하고 있다 42.9%, 매우 잘하고 있다 8.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51.4%, 부정 평가가 48.7%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 대한 평가는 전체 수준에서 보면 긍정이 근소하게 우세한 가운데 거의 절반으로 갈려 있는 셈이다. 다만 긍정 평가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온건한 범주에 집중된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투표선택별로 보면 이러한 전체 분포가 서로 다른 집단의 상반된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자 집단인 이재명 투표자는 78.1%가 특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많은 응답은 대체로 잘하고 있다(63.6%)였다. 반면 주요 패자 집단인 김문수 투표자의 88.0%는 특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많은 응답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53.2%)였다. 긍정 평가 비율로 보면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 사이에 66.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 나타난 제한적인 집단 차이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위치에 따라 크게 분화되었으며, 특히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 사이에서 가장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에서 긍정과 부정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은 응답자들이 중간적 평가에 수렴한 결과라기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집단별 분포가 합산된 결과에 가까웠다. 이준석 투표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36.1%)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6.3%)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 두 핵심 집단 사이의 중간적 분포를 보였다. 기권자는 부정 평가가 67.6%로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김문수 투표자와 같은 강한 집중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이라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정치적 위치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림 3. 계엄 사태 처리 방향에 관한 선호



세 번째 종속변수인 계엄 사태 처리 방향에서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핵심 책임자 중심으로 제한해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17.1%,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15.4%였다. 이를 두 계열로 구분하면 강경 처리 선호가 53.1%, 온건 처리 선호가 46.9%로 나타났다.

전체 분포는 중간 범주에 집중되기보다 서로 다른 방향의 선택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관련자 전반의 철저한 조사·처벌(37.7%)이었고, 그다음은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29.8%)이었다. 반면 핵심 책임자 중심의 제한적 조사·처벌이라는 중간적 선택은 17.1%에 그쳤다. 계엄 사태의 향후 처리 방향을 둘러싼 시민의 태도가 하나의 절충적 방안으로 수렴하기보다 상반된 방향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선택별 분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재명 투표자의 81.6%는 강경한 처리를 선호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은 관련자 전반의 철저한 조사·처벌(58.5%)이었다. 반면 김문수 투표자는 68.6%가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택했고, 강경 처리 선호는 13.0%에 그쳤다. 강경 처리 선호를 기준으로 핵심 승자·패자 집단인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 사이의 차이는 68.6%포인트였다. 따라서 계엄 사태의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서도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보다 정치적 위치에 따른 분화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특히 두 핵심 경쟁집단 사이에서 컸다.

이준석 투표자는 통합·미래 과제 집중(35.4%)과 관련자 전반 철저 조사·처벌(32.6%)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특검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의 중간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기권자 역시 통합·미래 과제 집중(40.8%)이 가장 많았지만, 김문수 투표자와 같은 정도의 집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기술통계를 종합하면, 정치갈등의 해결 방식에 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에서도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 간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 대한 평가와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서는 투표선택으로 포착된 정치적 위치에 따라 태도가 크게 갈렸다. 다만 세 문항은 측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집단 간 격차의 크기를 동일한 척도의 효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세 문항의 분포를 함께 보면,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일반적인 해결 원칙보다 현재의 구체적 사법절차와 책임 추궁의 방향에서 훨씬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최종적으로 세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모형에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가구소득, 주관적 이념성향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

표 2. 투표선택과 정치갈등 해결 관련 태도: 순서형 로짓 추정 결과

	사법적 문제해결 선호	특검 평가	계엄 처리 방향
김문수 투표(패자)	-0.217* (0.098)	-2.737*** (0.121)	-2.802*** (0.125)
이준석 투표	-0.108 (0.140)	-1.571*** (0.172)	-1.713*** (0.161)
기권	-0.005 (0.136)	-1.809*** (0.168)	-1.704*** (0.192)
주관적 이념	0.020 (0.024)	-0.221*** (0.026)	-0.172*** (0.023)
여성	-0.037 (0.073)	-0.043 (0.082)	-0.066 (0.077)
연령	-0.017*** (0.002)	-0.010*** (0.003)	-0.016*** (0.003)
대학 재학·졸업	0.035 (0.097)	-0.247* (0.102)	-0.128 (0.102)
대학원 재학·졸업	-0.132 (0.134)	-0.270† (0.140)	-0.185 (0.139)
인천/경기	0.122 (0.102)	-0.066 (0.115)	-0.053 (0.107)
대전/세종/충청	-0.086 (0.140)	0.046 (0.154)	-0.073 (0.158)
광주/전라	0.059 (0.142)	0.186 (0.162)	0.245† (0.145)
대구/경북	0.137 (0.147)	0.085 (0.164)	0.103 (0.160)
부산/울산/경남	0.036 (0.128)	0.011 (0.145)	0.070 (0.130)
강원/제주	0.101 (0.203)	0.053 (0.216)	-0.130 (0.200)
가구소득	0.004 (0.028)	-0.029 (0.030)	0.013 (0.027)
N	2,547	2,441	2,608
Pseudo R ²	0.012	0.202	0.190

주: 괄호 안은 robust 표준오차. 표본가중치를 적용함. 기준범주는 이재명 투표(승자), 학력은 고졸 이하, 지역은 서울. 종속변수는 세 문항 모두 값이 클수록 각각 사법적 해결, 특검 긍정 평가, 강경 처리 선호를 뜻함. 절단점은 생략. † p<0.1, * p<0.05, ** p<0.01, *** p<0.001.

먼저 정치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에서 김문수 투표자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이후에도 기준범주인 이재명 투표자보다 사법적 해결을 유의하

게 덜 선호하였다. 반면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는 이재명 투표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에서 이재명 투표자와 유의하게 구분되는 정치적 위치의 집단은 김문수 투표자뿐이었다.

3대 특검 평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문수 투표자는 이재명 투표자보다 특검을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기준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도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투표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계엄 사태 처리 방향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문수 투표자는 이재명 투표자보다 온건한 처리를 선호했으며,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 역시 이재명 투표자에 비해 온건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두 사안에서는 단순히 승자와 주요 패자 사이의 차이뿐 아니라, 투표선택으로 구분된 정치적 위치 전반에 따른 분화가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 연령은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고, 특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처리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특검 평가와 계엄 처리 방향에서는 유의하였다. 보수적일수록 특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엄 사태에 대한 온건한 처리를 선호하였다. 그 밖의 변수들은 특검 평가에서 대졸 집단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의 실질적인 크기는 예측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법적 해결을 선호할 예측확률은 이재명 투표자 44.5%, 김문수 투표자 39.4%로 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준석 투표자는 41.9%, 기권자는 44.4%로, 일반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네 집단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 특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예측확률은 이재명 투표자 73.8%, 김문수 투표자 17.2%였으며, 이준석 투표자는 38.8%, 기권자는 33.6%로 두 핵심 집단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재명 투표자를 제외한 세 집단 모두에서 긍정 평가의 예측확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특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재명 투표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계엄 사태에 대한 강경 처리를 선호할 예측확률 역시 이재명 투표자 75.6%, 김문수 투표자 17.3%였으며,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는 각각 37.5%, 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이후에도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패턴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정치갈등의 해결 방식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에서는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 실질적 크기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의 평가와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서는 정치적 위치에 따른 분화가

훨씬 뚜렷했다. 또한 이준석 투표자는 두 구체적 사안에서 대체로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기에서 비롯되는지까지 이 분석만으로 직접 식별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위치에 따른 태도 차이가 사법적 해결의 일반 원칙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절차와 책임 추궁의 방향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표 3. 투표선택 집단별 예측확률(%)

	사법적 문제해결 선호	특검 긍정 평가	계엄 사태의 강경 처리 선호
이재명(승자)	44.5	73.8	75.6
김문수(패자)	39.4	17.2	17.3
이준석	41.9	38.8	37.5
기권	44.4	33.6	37.7

주: 표 2의 각 모형에서 산출한 예측확률로, 다른 변수는 관측값에 둔 채 계산함. 문37은 온건한 사법과 강한 사법의 합, 문40은 긍정 평가 계열, 문41은 강경 처리 계열의 확률임.

5. 정리 및 결론

이 글은 계엄과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 이후 시민들이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는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할 것인지 사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호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 실질적인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대한 평가와 계엄 사태의 처리 방향에서는 정치적 위치에 따른 분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재명 투표자와 김문수 투표자 사이의 대비가 두드러졌다. 이는 정치적 위치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사법적 해결의 일반 원칙 자체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 현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접 연결된 구체적 사법절차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사법적 절차라도 승자에게는 정당한 책임 규명과 정치적 혼란의 종결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패자에게는 자신이 지지한 진영에 불리한 결과를 계속 부과하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확정된 정치적 승패가 이후의 수사와 재판, 책임 추궁의 과정과 맞물리는 상황에서는 사법적 절차 역시 정치적 경쟁의 외부에 놓인 중립적 종결자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한편 이준석 투표자와 기권자는 두 구체적 사안에서 대체로 승자와 패자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분포를 보였다.

결국 이 글의 결과는 현재의 사법절차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위치에 따라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법절차가 법적으로 갈등을 종결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의 정당성과 의미 자체가 정치적 승패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법적 종결이 곧 정치적·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글의 분석이 갖는 한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승자와 패자의 정치적 위치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양자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문수 투표자는 단순한 선거의 패자일 뿐 아니라, 계엄과 탄핵, 그리고 그에 뒤이은 책임 추궁에 대해 이미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된 차이를 선거 패배 자체의 독립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과 그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 역시 정당한 판정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확인된 큰 격차는, 적어도 현재의 사법절차가 서로 다른 정치적 위치의 시민들에게 동일한 정당성을 갖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자체만이 아니라, 상당한 반발과 대립을 수반할 수 있는 사법절차가 그 절차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도 충분한 절차적 동의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갈등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위해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문헌

- 길정아·성예진. 2023.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현대정치연구』 16(1), 45-87.
- 김용철 외. 2013. "선거규칙 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분석: 누가 왜 선거규칙의 변경을 지지 (반대) 하는가?: 누가 왜 선거규칙의 변경을 지지 (반대) 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7(5), 191-211.
- 김희만·송두리·성예진. 2017.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0(2), 99-129.
- 조진만·윤종빈·가상준·유성진. 2011.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20(2), 29-51.
- Anderson, Christopher J., AndréBlais, Shaun Bowler, Todd Donovan, and Ola Listhaug. *Losers' Consent: Elections and Democratic Legitimacy*. Oxford UP, 2005.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1997, pp. 66-81.
- Bartels, Brandon L., and Eric Kramon. "Does Public Support for Judicial Power Depend on Who Is in Political Power? Testing a Theory of Partisan Alignment in Af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4, no. 1, 2020, pp. 144-163.
- Blais, André, and François Gelineau. "Winning, Losing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55, no. 2, 2007, pp. 425-441.
- Curini, Luigi, Willy Jou, and Vincenzo Memoli.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the Winner/Loser Debate: The Role of Policy Preferences and Past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2, no. 2, 2012, pp. 241-261.
- Dahlberg, Stefan, and Jonas Linde. "The Dynamics of the Winner-Loser Gap i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vidence from a Swedish Citizen Panel."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8, no. 5, 2017, pp. 625-641.
- Doherty, David, and Jennifer Wolak. "When Do the Ends Justify the Means? Evaluating Procedural Fairness." *Political Behavior*, vol. 34, no. 2, 2012, pp. 301-323.
- Ferejohn, John.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5, no. 3, 2002, pp. 41-68.
- Hirschl, Ran. "The New Constitutionalism and the Judicialization of Pure Politics Worldwide." *Fordham Law Review*, vol. 75, no. 2, 2006, pp. 721-754.
- Mauk, Marlene. "Electoral Integrity Matters: How Electoral Process Condi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Losing and Political Trust." *Quality & Quantity*, vol. 56, 2022, pp. 1709-1728.
- Stone Sweet, Alec. *Governing with Judges: Constitutional Politics in Europe*. Oxford UP, 2000.
- Tate, C. Neal, and Torbjörn Vallinder, editors.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P, 1995.
- Tyler, Tom R., and Kenneth Rasinski. "Procedural Justice,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the Acceptance of Unpopular U.S. Supreme Court Decisions: A Reply to Gibson." *Law & Society Review*, vol. 25, no. 3, 1991, pp. 621-630.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6)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저자	성예진(yaejinsung@chonnam.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2893
팩스	02-882-2894
홈페이지	ifs.snu.ac.kr

이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견이며 국가미래전략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SSN 3058-5848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